

북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동 용 승*

- I. 서론
- II. 북일 경제관계의 현황
- III. 북일 경제관계의 명과 암
- IV. 과제와 시사점

요 약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납치문제로 인해 최악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북핵 실험 이후 개최된 6자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이 개최됐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양국간 경제관계도 실질적인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수교에 따른 일본의 대북 배상금을 예상하고 북한경제 회생의 절대적 자금으로 인식되는 두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핵 실험 이후에는 일본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 경제관계가 단절되면서 경제제재의 효과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직전에 실시된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는 양국의 경제교류를 중단상태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모든 유형의 제재를 취해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일본의 제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양국간 교역은 2007년 들어 대부분 중단됐지만, 그로 인해 북한측이 불편해 하는 모습은 나타나질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테러

* 삼성경제연구소(SERI) 경제안보팀장

지원국 해제와 같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지만 일본과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경제제재의 효용성에 회의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반면 양국간 관계 개선을 통한 일본 자금의 북한 유입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유용할 수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도 개혁개방 과정에서 일본의 자금이 경제발전에 기여했음은 많은 연구결과물로 증명된 상태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확산 현상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경제교류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조조무역'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북한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중국기업들과의 경제교류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에서는 양국간 경제교류가 다시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국내정치 상황과 북한의 입장이 상호 타협을 통한 해결점을 모색하기 힘들 정도로 강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위기요인을 해소하고 일본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양국 모두 현재의 경색국면을 풀어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진입해 있다.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대북 수입은 전무하고, 수출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납치문제의 해결없이는 관계 진전을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도 역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바라고 있지만 일본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양국관계가 풀려나갈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듯하다.

사실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는 오랜 기

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정치군사적 사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온 것도 사실이다. 양국간 경제교류의 시작은 1956년 9월 일조무역회,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일조협회 등 일본측 3단체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사이에 민간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중국 다롄(大連)을 경유하는 간접무역이 개시되면서부터이다. 수출입액을 각각 600만 파운드로 할 것과 품목, 결제, 수송, 중재 등의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었다. 결제 방식은 중국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북-일 무역은 중-일 무역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양국간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대소형 플랜트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에는 미결제 문제가 발

생하면서 일본기업들에 대한 교역 보험 및 공적 자금 융자의 적용이 정지되면서 거래는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와중에 일본기업이 후퇴하면서 북한과 조총련계 기업간의 이른바 조조무역(朝朝貿易)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84년 북한의 합영법 발표 이후에는 조총련계 기업들의 대북 직접투자가 급증했다. 이 시절 이후부터는 조총련계 기업들이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납치문제 등이 일본 국내에서 정치쟁점화됨과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제재는 물론 일본 내 조총련계 기업들에 대한 대북 경제교류 제한이라는 압력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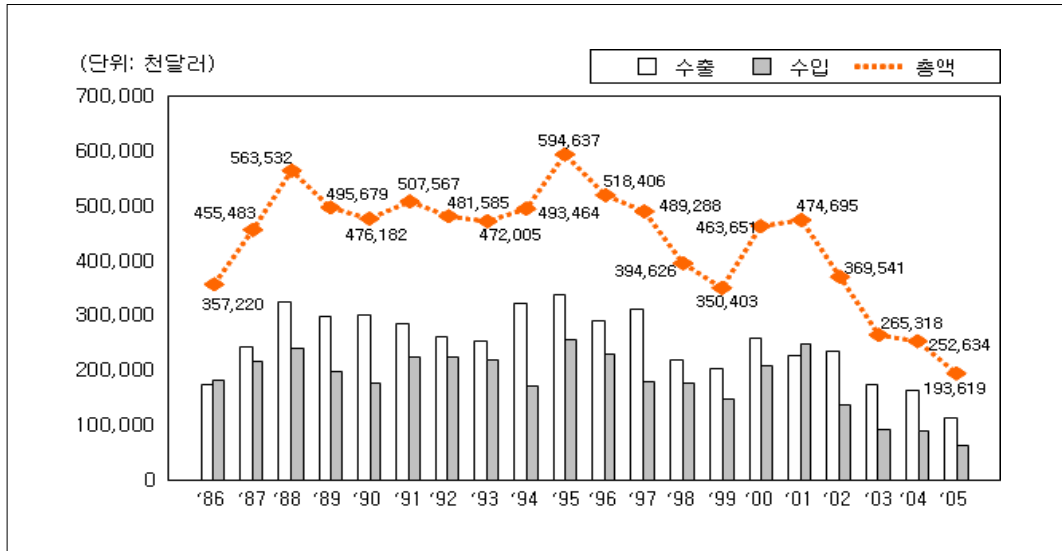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회생은 결국 일본자금의 유입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하다. 정치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 또한 보편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은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제재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양국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북일 경제관계의 현황

1. 축소일로에 있는 북일 교역

양국 경제관계를 대표하는 교역규모는 지난 10년간에 걸쳐 축소되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북한과 일본의 교역규모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군사적 요인에 기인하는 면이 큼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고려에 의한 식량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간 교역규모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1995년에는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였다. 이는 1995년 북한의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국제기구와 일본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자, 일본이 37만톤 규모의 쌀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는 김일성 사후 불안정한 북한체제가 식량문제로 인해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일본으로의 보트피플 유입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식량지원을 결정했던 측면이 있다. 1998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일본 열도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영향은 바로 양국간 경제교류에 나타났다. 교역규모가 4억 달러대에서 3억 달러대로 급감한 것이다. 그 이후 1999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진전을 위해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실시했고, 2000년

일본의 대북 교역 변화 추이



자료: 무역협회 및 KOTRA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과 2001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및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면서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자 교역규모가 일시적 증가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핵사건 발생으로 대북 지원이 중단되자, 교역규모는 다시 축소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2년 9월 고이즈미 전 일본 수상의 방북 이후 해결기미를 보이던 납치 문제가 일본 국내적으로 다시 문제시 되면서 양국간 교역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조총련 조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압박 강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래전부터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회의감을 가져 왔던 조총련계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대북 사업에서 철수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 스스로도 조총련계 기업들에게 부여했던 자율권에 다양한 제약을 가하면서 조총련계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줄였던 것도 경제교류의 축소를 부추겼다. 이 결과 1996년 5억 달러를 상회했던 양국간 교역이 10년 후인 2005년에는 2억 달러 미만으로 축소하게 됐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과 일본의 경제교류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 군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관계 구조의 특성에서 바로 반영된다. 즉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북한이 경제력 약화로 인해 주로 대량 살상

북한의 대일본 수출 상위품목(2005년)

단위: 천 달러

HS	품 목	2004년	2005년	증감율
03	어패류	71,697	36,309	-49.4
27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	10,638	17,435	63.9
85	전기기기	18,777	15,226	-18.9
07	야채	9,418	15,086	60.2
62	의류(편직물 제외)	24,217	13,003	-46.3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528	11,151	48.1
72	철강	9,811	10,265	4.6
73	강철제품	2,785	3,226	15.8
25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시멘트	2,012	2,956	50.0
26	광, 슬래, 회	1,277	1,685	32.0

자료: KOTRA

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이 사정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미사일 시험발사가 그렇고 핵실험이 그렇다. 반면 일본과 북한의 경제교류는 주로 조총련계 기업인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그 현상은 더욱 뚜렷해 졌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적 행동으로 일본이 불안해지면 그 영향은 바로 조총련계 기업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불안감이 조총련계 기업들에게 전가되어 이들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조총련계 기업들은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종래와 같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수할 경우 일본내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약화되는 현상으

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지난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 북한과 일본의 교역에서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품목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양국의 경제교류의 한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북일 교역은 2005년에는 전년대비 23.4% 감소한 1억 9,362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엔화 베이스로는 일본 재무성이 공표를 시작한 197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중국, 태국, 러시아에 이어 일본은 4번째 대북 교역국으로 내려 앉았다. 2002년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Catch All 규제'에 따라 일본의 대북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2005년 1월 일본 농림규격(JAS)법의 개정 에 따라 수입 바지락의 원산지 표시가 강화

북한의 대일본 수입 상위품목(2005년)

단위: 천 달러

HS	품목	2004년	2005년	증감율
87	차량	34,068	26,949	-20.9
85	전기기기	7,229	4,845	-33.0
84	기계류	6,817	4,131	-39.4
54	인조필라멘트섬유	5,233	2,698	-48.5
24	담배	2,547	2,192	-13.9
51	양모 및 그 직물	4,847	1,915	-60.5
40	고무와 그 제품	3,155	1,705	-46.0
73	철강제품	2,282	1,478	-35.2
44	나무	530	1,431	170.0
39	플라스틱	1,402	1,304	-7.0

자료: KOTRA

되었고, 2005년 7월부터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로운송차량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수출시 ‘말소가등록신청’이 의무화되고 2005년 3월 시행된 개정 ‘선박유타손해배상 보장법’의 성립 등이 북-일간 무역에 마이너스로 작용했던 것이다. 2005년 북한의 대일 수출총액은 1억 3,112만 달러로 전년대비 19.7% 감소했다. 북한의 주요 대일 수출품목은 어패류, 광물자원(무연탄), 전기전자제품, 야채(송이버섯), 섬유제품, 알루미늄, 철강제품 등으로 이들 제품이 대일 수출액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대일 수출 최대품목은 2004년과 동일하게 어패류였으나 전년대비 39.5% 감소(3,631만 달러), 이는 JAS법의 마지막 원산지 표시 규정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2005년 북한의 대일 수입도 200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다. 최대 수입품목은 수송기기로서 전체 수입품 중 43.1%를 차지했다. 전기전자제품은 전년대비 33.0% 감소한 485만 달러, 기계류는 전년대비 39.4% 감소한 413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는 북한의 수입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경제산업상이 ‘Catch All 규제’ 강화로 인해 일본의 대북 수출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일 최대수입품목은 중고 화물자동차로 차량 총중량이 5~20t, 배기량이 4,500cc 이상의 차량들이 주를 이룬다. 중고 버스도 전년대비 59.7% 증가한 342만 달러로 대일 수입 상위 3개 품목은 모두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중고 승용차는 중소형 모두 크

게 감소하였는데, 도로운송차량법 시행에 의한 말소가등록신청 의무화의 영향과 미보험 가입어선의 입항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어패류를 하적 후 귀국길에 중고승용차를 선적하는 횟수가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2. 대북 경제제재로 사실상 교류 중단 상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취해진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2006년 11월 이후는 양국간 경제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월 이후 2007년 1월까지 일본의 대북 수출은 전년대비 90% 가까이 감소했고, 대북 수입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13일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앞서 독자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내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 등이다. 그리고 향후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시하며 일본의 전면 수출 금지 등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제재조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전면 중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현실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기 때문에 취했던 조치 이전에 이미 2003년부터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다방면에서 제재를 취해오고 있었다. 일본 사회에서는 2003년 4월 말부터 대북 강경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자민당 아소타로 정조회장이 대북 경제제재를 주장한 직후인 2003년 5월 고이즈미 전총리는 북한 핵개발 대응과 관련 북한의 마약, 각성제 밀수와 미사일 관련 부품 등의 대북 수출을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니가타(新潟)에 입항하는 만경봉호(만경봉-92호) 감시·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만경봉호는 검사 강화 때문에 오랜기간 억류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2004년에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 송금 중지 등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외환법 개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2004.1.29)했다. 참의원에서는 대북 제재 검토 결의안을 채택(개정 외환관리법 및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등 효과적인 제재조치 발동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한 만장일치 채택)했다. 이후 자민당은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을 구성하여 '경제제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단계별 제재조치를 예시한 '경

경제제재 프로그램'이 납치문제 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11.5)되었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대북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005년에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규제를 겨냥한 개정 선박유탁(油濁)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2005.3.1)에 들어갔다. 이는 일본에 입항하는 100t 이상 선박의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자민당 간사장 대리였던 아베 수상은 “법 시행으로 북한 선박 입항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3년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횟수는 974회, 이중 보험 가입 선박은 2.5%였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일본 국토교통성에 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증명서를 교부 받은 북한 선박은 16척에 불과했다. 한편 자민당내에 설치된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제재관련 법안 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제재 실시촉진법안’ ‘북한 인권법안’ 작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경제제재 실시촉진법안’은 대북 송금제한을 겨냥한 ‘개정외환법’에 의거해 경제제재 발동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의 대북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납치문제전문 간사회회의에서는 대북 압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2006.3.13)했다. ‘법

집행반’은 법무, 재무, 경제산업, 금융, 경찰, 해상보안청 등 6개 중앙부처 관계자로 구성했다. 재일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재검토, 자금세탁 감시강화, 군사전용 우려 물자 수출관리 강화 등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정보수집회의’는公安조사청 장관, 외무차관, 경찰청장관, 내각정보관 등 4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불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 납치실행범 규명, 피해자의 북한내 생존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북한 미사일 7발 발사를 단행했다. 일본은 즉각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만경봉 92호 입항 6개월간 금지 조치(2006.7.5)를 취했다. 입항금지 외에 인적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북·일간 전세항공기 취항금지를 시행하여 북한 당국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한편, 일본 관리의 북한 방문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도 주력했다. ‘송금차단’ 관련법 제정, 전략물자의 수출 차단 규정 신설 등이 그것이다.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와 70억엔 상당의 쌀 지원대금 조기상환 요구(2006.7.7)도 아울러 추진했다. 북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300개 자국기업 중 수출규모와 북한과의 관계 등에 따라 ‘제재국 관련기업’을 지정하여 대북 우

회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일본에서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대북 금융제재 법안도 마련(7.31)했다.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을 정부가 지정, 국내의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 일체의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3일 북한은 중앙방송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발표했고,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 실시 반대 결의를 즉각 취했다. 일본 외무성도 만일 안보리 성명을 묵살할 땐 제재결의안을 추진('06.10.07) 하겠다고 밝혔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 알려지자 일본 최대 제철회사인 신일본제철은 철강생산용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자율적으로 중지(10.9)했다. 신일본제철이 매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연탄은 20억엔 상당규모로 일본의 대북 수입의 13%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속속 북한측과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닛산자동차는 10일 북한으로의 자동차수출 전면중단을 발표(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승용차 '아반'의 수출을 중단)했다. 돗토리(鳥取)현 사카미나토(境港)에서는 10일 해운회사들이 북한선박에서의 하역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카미나토는 일본 안에서 유일하게 북한의 원산지와 우호제휴 관계를 체결한 도시인데 관계를 파기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앞서 살펴 본 2006년 10월 13일 대북 제재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 상품 우회수입도 금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모든 북한 상품의 수입 금지를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우회수입품에 대해서도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수입업자에게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재조치 발동 후 제3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서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번 제재조치에는 대북 수출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로 중고 자동차와 중고 자전거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북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으로부터의 인적, 물적 유입을 전면 봉쇄하는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를 정식 결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성, 북한 공무원 등에 의한 항공기·선박 등의 테러에 대비, 대북 경계 수위를 강화했다. 제재조치가 발동되는 2006년 10월 14일 이후 북한국적 선박이 일본 영해에 진입할 경우 경고를 해 되돌아가도록 하되 강제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장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함에 따라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추가제재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군의 검사시 해상자위대의 선제 무기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고사격도 가능하다는 것과 정당방위에 한정됐던 무기사용을 완화하고 뱃머리 전방 해면을 향해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해당 선박이 수출을 금지한 물질을 수송하거나 그런 의심이 들 경우 회항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15곳과 개인 1명을 상대로 예금인출과 해외송금을 막는 금융동결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담배와 술, 고급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사치품에 대한 북한수출을 금지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환거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의거해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한국이나 중국 등을 경유한 우회무역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바지락과 성게, 대게 등 농수산물인 중국산 등으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에 철저한 보고를 당부하는 한편 북한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DNA 감정 등의 방법도 동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전세계적 범위에서 북한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본이 취한 대북 경제제재는 일본과의 교류에 국한되어 있지만, 매우 구체적이며 다방면에 걸쳐 있다. 결국 북한과의 교류 자체를 중단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Ⅲ. 북일 경제관계의 명과 암

1.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의 대북 제재는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분석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의 대북 물적 유입 전면 봉쇄(북한의 대일 수출 중단)에 따른 영향은 북한 군부의 외화수입을 줄이는데 기여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경제에 타격을 줄 수준은 아니며 북한입장에서는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본의 북한산 제품 수입구조는 농수산물, 위탁가공제품, 광산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로 채취상품, 또는 노동집약적 상품으로서 대부분 직접 외화수익을 올리는 상품군들이다. 결국 이들 상품을 수출했을 때, 외화수익을 챙기는 북한기관의 외화수입이 줄어들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과 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정

해 지는 측면, 그리고 다른 수출선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이들 상품군의 수출 중단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연쇄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 바, 이는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출 중에 송이버섯과 뽕싹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송이버섯의 경우 군부에서 관리하는 품목으로 군부의 외화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뽕싹의 경우는 협동농장으로부터 당소속의 무역회사들이 매집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쪽의 외화수입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수출 감소에 따른 고용감소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에 대비하여 한국, 중국 등으로 수출선을 옮기고 있으나 가격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수산물은 성게, 대게, 바지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물자는 모두 군부(특히 해군)에서 관리하는 물자이므로 역시 군부의 외화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수산물은 원산지 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중국산으로 변형되어 일본에 수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 일본에서는 DNA 검사 등을

통해 제3국 경유 물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 중국 단둥 지역에서 주로 북한산 수산물을 중국 기업이 사들여서 일부 상품으로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섬유류 등의 위탁가공 사업은 당장 중단될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생산기지 자체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중국 접경지역에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회사가 합영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일본의 위탁가공 주문물량을 소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북한산 제품 자체가 영향을 받을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회피해 나가는 것이 증가할 전망이다. 때문에 조만간 생산중단에 따른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탁가공 공장들이 주문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생산공장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면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중국측이 이 문제에 적극 협력할 경우에는 제재의 효과가 커질 수 있으나 중국의 입장은 유엔제재안의 범위에서 제재를 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편법 거래까지 제동을 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선박의 입항 금지에 따른 영향은 수

업 부문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대북 수출 구조는 중고 자동차, 위탁가공용 원재료, 공장 가동을 위한 필요 부속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고 자동차(승용차, 트럭, 버스 등)는 북한 내수용이라기 보다는 주로 청진, 나진항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로 재수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대당 1천 달러 내외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외화수입의 직접적 축소를 의미한다. 자동차 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당, 군, 정 등의 소속기관으로 수입이 분산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화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재수출 형태는 다른 국가를 경유할 경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위탁가공용 원재료 수출은 생산기지 자체가 중국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단기적으로 북한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른 생산 감소의 효과는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 내 위탁가공 생산의 중단으로 생산공장의 도산과 노동자들의 실직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제난을 가중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공장가동용 필요 부속품의 수입 중단은 공장 가동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가격 규모에 비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 북한의 공장들은 일본산 제품(부

속품)을 사용해야만 가동되는 설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내에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서의 수입 중단은 공장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선케이블이나, 발전기류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북한공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자들일 수 있다. 생활용품의 수입 중단은 북한고위층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서 경제적 효과보다는 고위층들의 생활불편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고위층은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일본 조총련계 기업인들과 연계되어 자신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공급받아 오고 있다. 특히 조총련을 담당하는 통전부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관련된 인물들, 또는 일본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 온 인물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상층부에 상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자체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조총련 및 일본무역회사 등을 통한 3국간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일본 영해나 인접지역을 지나서 북한의 화물선이 일본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경우 시간 및 유류의 추가적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제재에 따른 영향은 북한 외화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3년 전부터 제재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작스런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조총련 기업의 대북 송금은 이미 일본정부에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송금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내에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신용금고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 제한을 함에 따라 상당수의 신용금고가 문을 닫은 상태이다. 제3국을 경유한 송금의 경우 아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특정 기관 및 개인의 해외송금 자체를 막는 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의 교류 중단과 함께 중국으로의 집중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006년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눈에 띄는 현상은 북한의 대 중국 5대 수출품목 가운데 의류와 같은 공산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으로 향하던 섬유임가공 제품이 중국으로 이전되었거나 중국을 통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2. 북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은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개

최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단 일본은 북한의 초기이행조치에 따른 대북 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보류한 상태지만, 5개 워킹그룹 내에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일본은 베트남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첫 회담에서는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결렬된 형태로 끝났다. 그러나 6자회담의 전체적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과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후에 양국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접촉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를 말할 경우, 항상 그 바탕에는 양국의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의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경제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호 연계되어 변화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관심은 높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 수교를 매개로 해서, 대륙 즉 러시아 시베리아 자원 개발에 대한 '선점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중 각각 13%, 36~45%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극동지역은 천연가스의 10%를 생산하고 있고, 연료 및 비철 금속 생산의 1/2, 전력생산의 1/4을 담당한다. 실제 북

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진출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역할을 높이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RAND 연구소 보고서에는 일본의 역할을 유럽에서 영국과 같은 동맹국 역할로 향상시켜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일본간 쿠릴열도 분쟁을 중재하고 양자관계를 강화시킬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라면 북일 수교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모두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북일 수교시 예상되는 북한의 직접 경제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0~100억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대북 배상금을 통한 경제재건이 가장 큰 효과라고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베트남 등이 일본의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북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자를 포함해 총 936억엔에 달하는 북한의 대일 채무가 해결됨으로서 일본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관세혜택이 부여됨으로써 무역이 활성화되는 효과와 연계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적 리스크 감소에 따른 국제금융지원(공공 차관 도입 가능성)도 가능해 질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북한

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라는 선결조치가 필요한데, 현재의 분위기로는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해결되어 갈 경우 오히려 북미 관계는 북일 관계와 같은 속도 또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사회의 다국간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도 가능할 것이며, 각국별로 다양한 상업차관도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직간접 자금을 합하면 10년에 걸쳐 약 150억에서 200억달러 정도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교에 따라 일본 자금이 북한에 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인프라 투자의 경우 대체로 일본 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물 형태의 지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차관의 경우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게 될 것이다. 수송, 전력, 통신, 용수 등 경제 인프라나 교육, 의료 등 사회 인프라에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북한의 대일 수교자금 일부가 대 러시아 채무상환에 사용되는 등 자금의 혼용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이 러시아-북한간 철도연결 작업과 연계될 경우 효과는 더욱 배가될 수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연결될 때, 해상운송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부산-바르샤바

구간을 예로 들어 해상운송이(20ft 컨테이너 하나당) 2,250 USD 비용으로 28~31 일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경원선-TSR의 철도수송은 1,188 USD 비용으로 18일이 소요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상 운송이 대형선박 투입과 운임하락으로 그 차이를 줄였으나 1998년 러시아 철도부의 3단계 철도개혁안이 실행에 들어간 이후 TSR의 비교 우위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측은 TSR의 국내운임을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철도 이용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평양 축은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화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물동량의 28%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3대 교역권이다. 서울, 동경, 북경, 상해, 블라디보스토크 5대 도시간 이동거리를 각 도시를 중심으로 합하면 서울 3,600km, 동경 6,000 km, 북경 5,400km, 상해 5,200km, 블라디보스토크 4,700km 등으로 서울의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높다. 경원선, 경인선, 동해선이 모두 연결된다면 부산-서울-인천-평양-개성 등 한반도 전체의 물류 유통이 강화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논의가 활발히 거론되고 실제 경제통합론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일방적인 진출론이 사라지고 한반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IV. 과제와 시사점

현재의 시점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경제교류가 다시 재개됨은 물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납치문제에 집착해 있으며, 이 상황이 국내정치적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어려운 지경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 북한 역시 김정일이 직접 나서 해결한 문제를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한 이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일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는 최근에 개최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도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2.13 합의>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북한과 일본은 큰 틀을 위해 상호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오면서 가장 정치군사적 영향을 받지만, 관계가 진전될 경우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과 일본 모두가 대립보다는 화해를 찾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적대적 의존관계로서 북한이 군사적 위협행동을 취할 경우 일본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세력 규합이라는 효과를 거두면서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강화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취함으로써 일본으로서는 정상국가화로 나가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북한은 일본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체제 내부를 단속하는 효과를 거둬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볼모로 국제사회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 냉정히 판단해 보고, 과연 무엇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일본에 대한 위협을 약화시키는 지름길인가를 판단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이른바 ‘조조합영’ 사례는 현 시점에서 북일 경제관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84년 9월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과는 외국자본의 무관심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폐쇄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북측은 조총련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자유치에 들어갔다. 가장 많이 활동하던 90년대 중반까지는 조조합영기업들이 100여개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이는 일본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기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이미 북한 시장을 경험한 결과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철수의 이유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북한의 경제활동 환경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익숙한 조총련계 기업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경제계의 대북 시각은 바로 여기에 멈춰있는 것이다. 북한 시장을 판단할 때 조총련계 기업들의 실패 사례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북한시장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의 주류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주시하다시피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각 기업들은 독립채산방식으로 각자 먹고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차원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취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90년대 이후 북한에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는 수용하면서 큰 틀에서는 국가의 계획경제를 다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년에 들어서면서 북

한은 경제강국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핵 실험 이후 체제위협적 요소는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북한당국이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에 대해 억제책을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시장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소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례를 중국의 대북 경제협박 방식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교류는 이른바 기업 대 기업(B to B)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북한내부의 시장화 확산이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과 북한의 정부 대 정부(G to G)사업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관계유지를 위한 중국의 지원이라는 성격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중국정부의 대북 압박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시는 신의주를 통해 북한의 물자공급 배후시장으로서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의 70% 이상을 담당하면서 북한 내에서 시장화에 따른 부의 창출효과를 대부분 흡수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미 화교들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

서 북한의 시장화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이는 일본과의 경제교류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기업들이 만경봉호를 통하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북한과 교류할 경우 그 효과는 북한의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 북한 당국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화가 진행될 경우 내부적으로 그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오히려 북한당국이 우려하는 체제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북한 당국이 시장화를 억제하는데 일본과의 교류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기업 대 기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래의 경우 활용도가 크게 떨어짐은 중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당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산될 경우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 또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강경 대응으로 북한을 대할 경우 오히려 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지며 양국간 경제관계는 회복의 조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도 이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일본

의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지 수교자금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의 활동영역과 외화벌이도 한층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 이는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다. 금번 6자회담에서도 북한은 분명히 이 문제를 인식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

분히 얻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무엇보다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는 이미 북한당국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확산을 막기 어려운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에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후 개방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자산가 계층을 양성함과 동시에 개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의 경제교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